

데스크 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화순 북면에 있는 아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7명인 미니 학교다. 그나마 6학년생 10명이 졸업하게 되는 내년에는 신입생 2명을 포함해도 학생 수가 19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골의 작은 학교이지만 교육 환경은 웬만한 도시보다 낫다. 개인 태블릿PC가 전교생에게 지급되었고, 운동장엔 천연잔디가 깔려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백암산 자락에 자리 잡아 자연 경관도 최고다.

그런데도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던 참이었는데, 새 교장이 오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신입 교장은 관사 부지에 새 집을 지어 전학 오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화순군과 화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건축비 등을 지원받았는데 다음 달 완공된다. 무상 임대 소식이 알려지자 도시에서 전학오겠다는

지방 소멸 막을 특별법 절실하다

전화가 걸려 왔다. 입주자는 쌍둥이 자녀를 둔 광주 사람으로 결정됐다. 쌍둥이가 내년엔 입학해 중학교를 아산초 인근 북면중으로 가면 최대 9년간 무료로 살게 된다. 이러한 아산초교의 사례는 농촌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고, 웬만한 인센티브가 아니고선 젊은 층을 잡아 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인구 정책 바로잡아야

전남의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소멸을 거론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전남 인구는 하루 평균 65명씩 감소해 186만 명선까지 내려왔다.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청년(18-39세) 인구는 해마다 감소한다는 데 있다. 전남의 노인 인구는 41만 명으로 청년 인구 45만 명과 비슷하다. 이미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에 있다. 전남은 출산율이 세종에 이어 전국에

서 두 번째로 높은 데도 해마다 유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교부세 혜택 등을 노리고 지방 자치단체 간 인구 뺏어 가기 경쟁이 불붙고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 빼가기 전쟁이다. 연말이면 주소지를 이전하는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인구 감소는 정부의 인구 정책이 출산율 높이기에만 맞춰져 있는 탓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 출생 인구를 늘리면 그만이지만 지방은 전담처럼 출산율을 높여봤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인구 정탈전은 비단 지방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처럼 정부의 인구 정책에 지방이 없다면 지방의 인구 유출은 결코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소멸은 필연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청년 신도시 조성' 정책을 보면 '지방은 안중에 없다'는 여당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신도시를 짓겠다는 구상

을 밝혔는데, 아무리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총선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방 죽이기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수도권 중심 사고 탈피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감은 생각보다 크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전남도와 경북도는 급기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수도권 인원에 밀릴 것이라 위기감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을 정도다"라며 "가칭 '지역인구협력특별법'을 만들어 일본처럼 법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인구 정책은 아직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갈수록 기울어져 가는 인구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지역 균형 발전은 헛구호일 뿐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참으로 놀랍게 발전해 왔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발전을 물론 시민들의 정치 의식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대표되는 정치인들이 체계적으로 정치 문화를 습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축적된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을 정치 무대에서 펼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자들이 정치 무대에 진입하여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 각각의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 국민 수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식민사관에 의하면 과거 조선은 치열한 당파 싸움에 의해 망했다고 한다. 몽고의 침입과 왜적의 침입에 대해서 당파 싸움을 하였고 이런 당쟁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어 조선은 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사실일 것 같다. 언론은 조국 사태와 지소미아(GSOMIA) 논쟁을 통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당쟁이 없고 국론 분열 없이 국민의 의견이 일치되면 그 나라나 민족은 번영하게 되는가?

당쟁은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다 시 말하면 당쟁이 없는 것은 곧 일당 독재나 독재 국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는 미국을 보자. 참으로 치열하게 싸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 복지나 외교 등에 대해서 의회 내부끼리 또는 의회와 대통령이 끊임 없이 비난하고 다룬다.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다 끝내는 합의한다. 미국에서도 의회의 예산 승인이 거부되어 행정부가 일정 기간 업무를 못하고 문을 닫아까지 했다. 이에 반하여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춘 중국은 어떠한가. 당쟁이 없고 시위도 없고 국론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은 자민당

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의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수시로 선거는 치러지지만 아베는 독재처럼 오래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잘 못치는 민족이고 가마카제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기에 개인적인 정치 욕구가 자제된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세계적인가? 병자호란을 다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몽고에 항복하는 것이 치욕이지만 결국 백성을 살리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후세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 죽는 다 해도 결코 항복할 수는 없다고 맞선다. 끝까지 자신의 논리로 주장하고 설득한다.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인조는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당시 감동했던 것은 각자 치밀한 근거와 배경을 나열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점이였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서 자신의 주장에 집중해 인조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수준은 조선 시대보다 더 미개한 수준이다. 자신만의 논리도 없고 치밀한 설득의 전략도 없고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한 번 더 금배

지를 달고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하는 것에만 욕심이 있다. 병자호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고 결정한 법에 의해 각자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가전제품 선택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제품일 것, 내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 고장이 잘 나지 않아야 할 것, 몇 년을 써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 등과 같은 구매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선거에서 정치인을 선택할 때도 유권자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자신의 정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억지 부리고 싸우고 국회를 문 닫게 하고 논리 없는 주장을 하고 국익보다는 자신을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임금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민족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다양한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문화는 또 다른 경쟁력이다. 이제는 정치를 바꿀 때다.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 정치인을 골라내야 한다. 언제까지 지역주의를 고민할 것인가.

社說

5·18 관련 미국 자료 이제는 공개할 때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5·18 관련 자료의 공개를 공식 요청해 주목된다. 미국 측 자료가 확보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5·18 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주 주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관련 기록물 공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가기록원, 5·18기념재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개 요구할 자료와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그동안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삭제(black out) 처리됐던 부분을 추가로 밝혀 줄 것과 5·18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미국 정부 기관 보유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행방으로 여겨졌지만 5·18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과 광주로의 군이동을 목인·방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서룩이 공개한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북한군 개입설 역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을 통해 날조됐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5·18 관련 미국 측 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 계통 등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 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5·18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미국 정부는 5·18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자료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시도 상생 발전 위해선 실무 대화부터 늘려야

이용섭 광주 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오랜만에 만났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 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입장 차이 때문에 이전을 보지 못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문제 합의안이 도출됐다.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 재단 설립 문제의 경우 내년 중 국책 연구기관에 공동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시도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 전남의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핵심 산업 성공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역량이 추진키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옮겨올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은

일정 부분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시도 민이나 지역 정치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선언적 합의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공대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꼽혔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공동 유치 방안은 아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다.

양 시도 수장이 만나서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짚은 실무회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어 갈 정책 발굴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진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면서 소통과 접촉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쟁에서는 '피아식별'(彼我識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 오인 사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아'(彼我)란 '그와 나 또는 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식별'(識別)은 분별하여 알아본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놓고 일부 국내 정치인

과 일본이 각각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공을 들이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익을 내팽개쳐 미국과 일본 편에서 '내부 총질'을 하며 정부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 특히 한미일 삼국 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외교와 안보는 때여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가 간 동맹이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에서 있어서는 철저히 국익(國益)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cki@

피아식별

| | |
|-----------------------------------------------------------------------------------------------------------------------------------------------------------------------------------------------------------------------------------------------|-------------------------------------------------------------------------------------------------------------------------------------------------------------------------------------------------------------------------------------------------|
|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지)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 |
|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p> <p>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p> <p>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p> <p>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p> <p>전남본부 220-0642</p> |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p> <p>(FAX 222-8005) (FAX 222-0195)</p> <p>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p> <p>(FAX 222-0195) (FAX 222-0195)</p> <p>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p> <p>(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
|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기 고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말)도 역사성을 가지며 한 시대를 반영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유명한 말도 결국 언어를 존재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존재는 의식을 결정한다'라는 명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의식과 존재, 언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글이 처음부터 좀 까다로운 철학적 담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출신이니 하는 단어는 대학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먼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소위 '수저 계급

수저 계급론과 '21세기 자본'

론'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며 사회가 양극화되고 계층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10여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말이다. 수저 계급론은 옛날 봉건시대 유럽 귀족층에서 주로 은식기를 사용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은수저를 이용해 젖을 먹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사회가 옛날 유럽 식 봉건 계급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봉건 사회의 특징은 출신 성분에 따라 신분이 계급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사회경제적 계층 분화가 오랜 세월 속에서 계급(class)으로 변해간다. 계급이란 고정되고 세습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한창 꿈을 좇아야 할 젊은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금수저, 흙수저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으로부터 5년여 전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을 출판하여 세계 지식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주장이 새삼 주목된다. 그는 18세기 이후 3세기에 걸친 20여 개국의 부(wealth)와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

석하면서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로 최근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의 흐름을 통찰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진행되었다고는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중세 봉건 시대처럼 세습 받지 않고서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한 격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상위 1%의 배당 소득은 약 75%, 이자 소득은 45%에 이르고, 상위 10% 세율 속에서 계급(class)으로 변해간다. 계급이란 고정되고 세습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한창 꿈을 좇아야 할 젊은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금수저, 흙수저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으로부터 5년여 전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을 출판하여 세계 지식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주장이 새삼 주목된다. 그는 18세기 이후 3세기에 걸친 20여 개국의 부(wealth)와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

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과거 봉건신분제 계급 사회 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자살률, 정신 질환 유행률과 수감률 증가, 상호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정적 현상도 심화된다고 한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다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모와 40대 세 명의 딸. 이들은 빛이늘어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연속되는 가족 동반 자살 행렬을 보면서 사회 문제와 복지 문제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다.

일찍이 중국의 고전 '논어' 계씨(季氏)편에서 공자는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균등하지 않음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했다. 이 말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뜻으로 절대적 빈곤보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을 더욱 불행하게 느낀다는 의미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이며 사회 복지의 역할을 더욱 필요하게 한다.